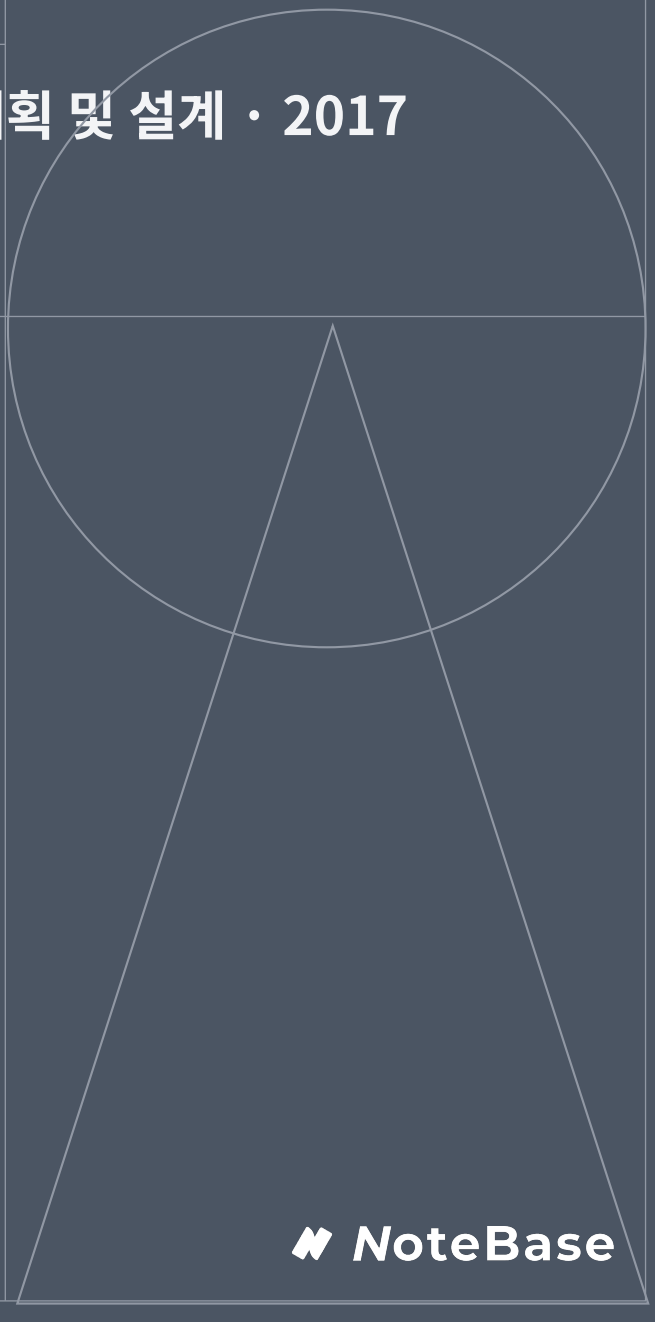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7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7

문 1. 조경계획과정 중 기본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

② 수요추정 프로그래밍

③ 동선계획

④ 식재계획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경계획과정에서 기본계획단계는 공간 형태를 구체적으로 배치하기 전 이용 수요와 기능을 정리하는 프로그래밍 단계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프로그래밍은 대상지의 이용자 요구, 필요한 시설, 규모와 기능을 정리하여 계획의 전제를 세우는 작업이다.
토지이용계획과 동선계획은 이렇게 정리된 프로그램을 실제 공간 배치로 풀어내는 계획 내용이다.
식재계획은 수종 선정과 배식, 식재공간 구성을 다루는 설계 단계의 세부 계획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하는 내용이므로 프로그래밍 이후의 공간계획 단계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기본계획단계에서는 토지이용의 전제가 되는 이용 요구와 기능을 정리한다.
② O: 수요추정 프로그래밍은 이용자 요구와 필요한 시설, 규모를 정리하는 기본계획단계의 핵심 내용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동선계획"이다. 동선계획은 사람과 차량의 흐름을 실제 배치도에 반영하는 공간계획 내용이므로 프로그래밍 이후 단계에서 구체화된다. 올바르게는 기본계획단계에서는 동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이용 행태와 기능 요구를 파악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식재계획"이다. 식재계획은 수종 선정, 배식, 식재공간 구성을 다루는 설계 단계의 세부 내용이다. 올바르게는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식재의 기능 요구나 필요한 녹지 프로그램을 정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계획"이라는 단어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도 모두 기본계획단계의 내용으로 섞어 보기 쉽다. 이 문항은 프로그램 정리 단계와 실제 공간 배치 단계를 구분하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자 요구, 규모 산정, 수요 추정처럼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하면 프로그래밍이다. 토지이용, 동선, 식재처럼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를 정하면 공간계획 또는 설계 단계이다.

암기 포인트

기본계획은 먼저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토지이용·동선·식재는 그다음 공간배치에서 구체화된다.

NoteBase

문 2. 비탈면 생태복원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탈면 복원목표는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된다.

② 내륙지역에서 복원목표를 정할 때,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생태자연도 등급 및 녹지자연도 등급에 따라 비탈면의 형상과 토질을 선택한다.

③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별도관리지역은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자연경관복원형으로 복원한다.

④ 옹벽 전면에 흙 또는 어떤 압력이 구조물을 뒤로 되밀어낼 때, 벽 뒷면의 토양을 압축하여 파괴하려는 경우를 주동토압이라고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탈면 생태복원 목표의 유형 구분과 옹벽의 주동토압·수동토압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탈면 복원유형은 대상지의 보전가치와 입지 조건에 따라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 등으로 나뉜다.
주동토압은 옹벽이 뒤로 물러나며 배면토가 이완될 때 흙이 벽을 미는 토압이고, 수동토압은 옹벽이 흙 쪽으로 밀려 들어가 배면토가 압축될 때 생기는 저항토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녹화지역과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복원목표를 초본위주형, 초본·관목혼합형, 목본군락형, 자연경관복원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은 비탈면 생태복원 목표 설정의 기본 틀에 해당한다.

② O
내륙지역 비탈면의 복원목표는 경관성과 생태성을 함께 보며 정한다. 이때 생태자연도와 녹지자연도 같은 등급, 그리고 현장 비탈면의 형상과 토질 조건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복원유형을 정하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③ O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과 별도관리지역은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구간이므로 인공성이 강한 복원보다 자연경관복원형을 적용하는 방향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주동토압'이다. 선지의 설명처럼 구조물이 흙 쪽으로 밀려 들어가 벽 뒷면 토양을 압축해 파괴하려는 상태는 수동토압이다. 주동토압은 반대로 옹벽이 뒤로 이격되면서 배면토가 이완될 때 작용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구조물을 뒤로 되밀어 낸다'는 표현 때문에 토압이 벽을 미는 상황이라는 점만 보고 주동토압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판별 기준은 힘의 이름보다 배면토의 상태와 벽의 이동 방향이다. 배면토가 압축되어 파괴되면 수동토압이고, 이완되어 미끄러지면 주동토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탈면 복원 문제는 먼저 대상지의 보전등급이 높을수록 자연경관복원형에 가깝다는 축으로 정리한다. 토압 문제는 벽이 흙에서 멀어지는지, 흙 쪽으로 들어가는지만 보면 된다. 멀어지면 주동, 흙을 압축하면 수동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보전가치가 높으면 자연경관복원형, 벽이 흙에서 멀어지면 주동토압, 흙을 밀어 압축하면 수동토압이다.

NoteBase

문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사업의 종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모: 사업계획 면적 5, 000m^2 이상

② 대상사업의 종류: 개발제한구역, 규모: 사업계획 면적 5, 000m^2 이상

③ 대상사업의 종류: 농림지역, 규모: 사업계획 면적 7, 500m^2 이상

④ 대상사업의 종류: 보전관리지역, 규모: 사업계획 면적 7, 500m^2 이상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지역별 기준면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최소 대상면적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다.
보전관리지역은 사업계획 면적 5,000m^2 이상, 농림지역은 7,500m^2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m^2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5,000m^2 이상이다.
따라서 7,500m^2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이 사업계획 면적 5,000m^2 이상이므로 옳다.

② O
개발제한구역은 사업계획 면적 5,000m^2 이상이 기준이므로 옳다.

③ O
농림지역은 사업계획 면적 7,500m^2 이상이 기준이므로 옳다.

④ X
보전관리지역의 기준은 사업계획 면적 7,500m^2 이상이 아니라 5,000m^2 이상이다.
틀린 표현: "보전관리지역 사업계획 면적 7,500m^2 이상"
올바른 표현: "보전관리지역 사업계획 면적 5,000m^2 이상"

오답 포인트

관리지역 내부의 세부 구분을 한 묶음으로 외우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기준이 뒤섞이기 쉽다. 이 문항은 농림지역 7,500m^2 기준을 보전관리지역에 옮겨 붙인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명을 먼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나눈 뒤 숫자를 대입하면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 가장 엄격한 축에 속하므로 5,000m^2 기준으로 판단하고, 7,500m^2는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쪽 숫자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보전관리 5,000, 농림 7,500, 자연환경보전 5,000, 개발제한 5,000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4. 2016년 1월에 제정된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경진흥시설에는 5개(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②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③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④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2016년 1월 7일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상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에서 업체 수, 중소기업자 비율, 면적 비율, 공동이용시설 설치 요건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핵심 구분

제6조의 지정 요건은 숫자 기준과 시설 기준이 함께 제시된다. 입주 조경사업자 수는 5개 업체 이상이고 서울특별시는 10개 업체 이상이며,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이다. 조경사업자 사용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총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공용회의실과 공용장비실 등 공동이용시설도 설치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제6조는 조경진흥시설에 5개 업체 이상,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을 요건으로 둔다.
2번 O: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
3번 X: 제6조는 입주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한다. 틀린 표현은 '100분의 20 이상'이고, 올바른 표현은 '100분의 30 이상'이다.
4번 O: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③의 중소기업자 비율 수치이다. 20퍼센트와 30퍼센트를 바꿔 놓으면 다른 요건들이 모두 익숙해 보여도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수치 문제는 업체 수, 비율, 면적, 시설 설치 여부를 항목별로 끊어 확인하면 된다. 특히 비율 수치는 다른 요건과 섞지 말고 조문상의 숫자를 그대로 대조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서울 10개 업체, 중소기업자 30퍼센트, 면적 50퍼센트,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4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중 연결녹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이다.

②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80% 이상으로 한다.

④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설치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연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중 기능, 폭, 녹지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폭은 원칙적으로 10미터 이상, 녹지율은 70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연결녹지 =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설치·관리하는 녹지이다.
녹지율 =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중 녹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핵심 구분

연결녹지는 기능상으로는 큰 숲이나 하천을 잇는 녹지축, 주요 공원·녹지와 생활권을 잇는 망, 산책·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공원 기능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폭은 10미터 이상이고 녹지율은 70퍼센트 이상이다. 다만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이거나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7

선지별 해설

① O
연결녹지는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라는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선지이므로 옳다.

② O
연결녹지의 폭은 원칙적으로 최소 10미터 이상이다. 예외적으로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이거나 다른 도시·군계획시설 때문에 녹지 단절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연결녹지의 녹지율은 80퍼센트 이상이 아니라 70퍼센트 이상이다.
틀린 표현: 80% 이상
올바른 표현: 70% 이상
따라서 선지 자체가 틀렸고,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이 된다.

④ O
연결녹지는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연결녹지가 고려해야 할 기능 중 하나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연결녹지의 녹지율을 완충녹지 등의 높은 녹화면적률 수치와 혼동하도록 만든 함정이다. 이 문항은 연결녹지의 기능 설명은 그대로 두고 수치만 80퍼센트로 바꾸어 오답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결녹지 문제는 먼저 정의와 기능을 확인한 뒤 수치 기준을 따로 분리해서 본다. 연결녹지는 폭 10미터, 녹지율 70퍼센트를 기본값으로 잡고, 예외는 폭 기준에만 붙는지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연결녹지 = 생활동선 연결, 폭 10미터, 녹지율 70퍼센트이다.

NoteBase

문 6. 어떤 대상지의 공사면적을 수치지도에서 구했더니 $5972.4276m^2$이다. 설계서에 적용해야 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단, 「건설공사 표준품셈(2017)」에 따른다.)

① $5972m^2$

② $5972.4m^2$

③ $5972.43m^2$

④ $5972.428m^2$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치지도에서 구한 공사면적을 설계서 적용 기준에 맞는 소수 자릿수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5972.4276m^2$
구해야 할 값: 설계서에 적용할 공사면적
주의할 조건: 「건설공사 표준품셈(2017)」의 면적 표시 자릿수 기준에 맞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리한다.

사용할 공식

이 문항은 별도의 면적 재계산 공식이 아니라 표시 자릿수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5972.4276 \rightarrow 5972.4$
이 기준을 쓰는 이유는 설계서 적용 면적은 m^2 값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리해 적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원면적은 $5972.4276m^2$이다.
2. 설계서 적용 자릿수는 소수 첫째 자리이다.
3. 소수 둘째 자리 숫자는 2이므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리한 값은 $5972.4m^2$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5972m^2$는 정수까지만 남겨 소수 첫째 자리 기준을 버린 값이다. 올바르게는 $5972.4m^2$이다.
② O. $5972.4276m^2$를 설계서 적용 자릿수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리하면 $5972.4m^2$가 된다.
③ X. $5972.43m^2$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자릿수가 과하다. 올바르게는 $5972.4m^2$이다.
④ X. $5972.428m^2$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남겨 기준보다 지나치게 세밀하게 적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5972.4m^2$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계산 자체가 아니라 자릿수 기준이다. ①처럼 정수로 너무 크게 줄이거나 ③, ④처럼 원수치를 더 많이 남기면 모두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면적·길이·수량처럼 이미 계산된 값이 주어지면 먼저 다시 계산할 문제인지, 아니면 표기 자릿수만 적용할 문제인지를 구분한다. 그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단위와 소수 자릿수 기준만 맞춰 값을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이미 구한 면적값은 설계서 자릿수 기준에 맞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리한 값이 답이다.

NoteBase

문 7. 식생환경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도(importance value)는 군집의 종다양도를 표현하는 지표이며,
「(상대빈도+상대밀도+상대우점도)/3」로 산출한다.

② 빈도(frequency)는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총 방형구 수)×100(%)」로 산출한다.

③ 우점도(dominance)는 군집 내에서 특정 종이 우점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1에서 균제도지수를 뺀 값으로 표시한다.

④ 대상적선법(belt transect method)은 초지식생조사에 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상층수관은 50m, 하층 및 중층은 10~15m를 하나의 조사구로 하며 빈도, 피도, 밀도 등을 계산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중요도, 빈도, 우점도, 대상적선법의 정의와 적용 방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요도는 군집 내 특정 종의 상대적 우세성을 상대빈도·상대밀도·상대우점도로 종합한 값이다.
빈도는 한 종이 전체 조사구 중 몇 개의 방형구에 출현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대상적선법은 환경구배나 군집 경계를 따라 띠 모양의 연속 조사구를 설치하여 식생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중요도는 군집 안에서 한 종이 얼마나 우세한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보통 상대빈도, 상대밀도, 상대우점도를 평균하여 (상대빈도+상대밀도+상대우점도)/3으로 정리한다.

② O
빈도는 특정 종이 나타난 방형구의 비율이므로 (특정 종이 출현한 방형구 수)/(총 방형구 수)×100으로 계산한다. 출현 횟수가 아니라 출현한 조사구의 수를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O
우점도는 군집 내에서 특정 종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균제도가 높을수록 특정 종의 편중이 작아지고, 균제도가 낮을수록 우점 경향은 커지므로 우점도는 균제도와 반대 방향의 값으로 이해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초지식생조사에 주로 이용되며 상층수관은 50m, 하층 및 중층은 10~15m를 하나의 조사구로 한다'는 표현이다. 대상적선법의 본질은 띠 모양의 조사구를 연속적으로 배치해 환경 변화에 따른 종 분포와 피도·밀도 변화를 보는 데 있고, 조사구 크기를 층위별로 50m나 10~15m로 고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올바르게는 '대상적선법은 띠 모양의 연속 조사구를 두어 식생의 분포 변화와 우점 양상을 조사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4번은 대상적선법의 정의에 다른 조사구 크기 기준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식생조사 문항에서는 지표의 계산식과 조사법의 조사구 배치 방식을 분리해서 봐야 혼동이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생환경분석 문제는 먼저 '지표를 묻는지, 조사법을 묻는지'를 가른다. 지표는 계산식과 의미로 판단하고, 조사법은 조사구를 어떤 형태와 배열로 두는 방법인지로 판단하면 정오가 빨리 갈린다.

암기 포인트

중요도는 상대값 3종의 종합, 빈도는 출현 방형구 비율, 대상적선법은 띠 모양 연속 조사라는 틀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은 계절별 2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②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이후는 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한다.

③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④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를 조사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가 정한 생태통로 조사 주기·방법과 조사사항·평가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성 후 3년 동안과 그 이후의 조사 빈도, 그리고 조사사항과 평가기준의 문구를 정확히 나누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생태통로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서식지를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통로이다.
감시장비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생태통로 이용 여부를 일정 기간 확인하는 장비이다.

핵심 구분

조성 후 3년 동안은 직접조사라면 계절별 1회 이상, 감시장비 조사라면 계절별 1개월 이상이다. 조성 후 3년이 지난 뒤에는 직접조사는 연 1회 이상, 감시장비 조사는 연 1개월 이상이다.
같은 조문은 ① 조사 주기·방법, ② 조사사항, ③ 조사 결과 평가기준을 함께 둔다. 조사사항에는 야생동물의 종과 종별 이용 빈도 등이 들어가고, 평가기준에는 탐방객 출입행위와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는지 여부가 들어간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17

선지별 해설

① X
조성 후 3년 동안의 현장 직접조사는 계절별 1회 이상이다. 선지의 "계절별 2회 이상"이 틀렸다.
틀린 표현: 계절별 2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
올바른 표현: 계절별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

② O
조성 후 3년 이후 감시장비 조사 주기는 연 1개월 이상이다. 직접조사와 감시장비 조사의 연간 기준을 구분하면 맞는 선지이다.

③ O
같은 조문은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결과 평가기준으로 둔다. 생태통로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맞다.
이 선지는 야생동물 이용 빈도 같은 조사사항이 아니라 관리·통제 상태를 보는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④ O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는 조사사항에 포함된다. 실제 이용 실적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조사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조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바꿔 놓은 수치 함정이다. ③은 조사사항과 평가기준 문구가 같은 조문 안에 함께 있어 조문 구조를 모르면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성 후 3년 동안인지, 그 이후인지부터 나눈다. 그 다음 직접조사인지 감시장비 조사인지 구분해 계절별 1회·1개월과 연 1회·1개월을 대응시키면 된다. 내용 선지는 야생동물 이용 현황 같은 조사사항과 탐방객 통제 여부 같은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생태통로는 3년 이내는 계절 기준, 3년 이후는 연 기준이며 직접조사는 1회, 감시장비는 1개월이다.

NoteBase

문 9.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②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원의 설계와 관리,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이다.

③ 공공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④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당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원의 정의,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 정원의 법정 분류, 민간정원 공개 시 입장료 허용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정 문구를 그대로 대조하여 '공공정원/공동체정원', '설계/유지관리 및 전시',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를 가려내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정원 =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다.
공동체정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민간정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이다.

핵심 구분

당시 법률상 정원의 수행사업에는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가 들어가고, '정원의 설계'는 법정 문구가 아니다.
또한 제시된 공동 운영형 정원의 법정 명칭은 공공정원이 아니라 공동체정원이다.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정원의 법정 정의를 그대로 옮긴 문장이다.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이 맞다.
② X: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정 문구는 '정원의 설계와 관리'가 아니라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이다.
틀린 표현: 정원의 설계와 관리
올바른 표현: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③ X: 제시된 내용은 당시 법률의 '공동체정원' 정의에 해당한다. 공공정원이라는 분류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 공공정원
올바른 표현: 공동체정원
④ X: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
올바른 표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비슷한 법률용어를 바꿔 끼우는 데 있다. ②는 '유지관리 및 전시'를 '설계와 관리'로 바꾸었고, ③은 '공동체정원'을 '공공정원'으로 바꾸었으며, ④는 허용 규정을 금지 규정처럼 뒤집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선지는 먼저 법정 용어를 그대로 대조하고, 다음으로 분류명, 사업명, 허용·금지 표현을 확인한다. 특히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법정 명칭의 한 글자 차이, 정의 조문의 원문 일치 여부가 정답을 가른다.

암기 포인트

정원 정의는 그대로, 사업은 유지관리·전시, 공동 운영형은 공동체정원, 민간정원 공개 시 입장료 가능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물순환 관련 시스템으로서 가장 알맞은 시설물은? (단, 「조경설계기준(2013)」에 따른다.)

① 빗물받이

② 맨홀

③ 맹암거

④ 침전조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 설계기준(2013)」상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일반 배수시설과 물순환 도입시스템으로 직접 제시된 시설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 = 우수의 침투·저류·정화·재활용을 통해 물순환체계를 회복하도록 계획하는 시설군이다.
침전조 = 우수 속 분진·모래 입자 등을 가라앉혀 제거하고 유기물 정화를 돕는 시설이다.

핵심 구분

기준은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을 별도로 열거한다. 그 목록에는 침전조가 직접 들어가지만, 빗물받이·맨홀은 일반적인 집수·점검 시설이고 맹암거는 심토층 배수시설로 다루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빗물받이는 표면의 빗물을 모아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일반 집수시설이다.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으로 별도 열거된 시설은 아니다.
틀린 표현: 빗물받이
올바른 표현: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으로는 침전조가 해당한다.

② X
맨홀은 관로의 점검·유지관리와 연결을 위한 시설이다. 물순환 도입시스템의 대표 시설로 제시된 항목이 아니다.
틀린 표현: 맨홀
올바른 표현: 맨홀은 점검시설에 가깝고,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으로는 침전조가 해당한다.

③ X
맹암거는 지하수위 저하와 정체수 배제를 위한 심토층 배수시설이다. 기준에서도 심토층 배수 항목에서 다루어지며,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 항목의 직접 열거 대상은 아니다.
틀린 표현: 맹암거
올바른 표현: 맹암거는 심토층 배수시설이고,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으로 직접 제시된 것은 침전조이다.

④ O
침전조는 기준의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에 직접 제시된 시설이다. 우수에 포함된 분진·모래 입자 등을 침적시키고 유기물 정화를 돕도록 설계하는 시설이므로 정답이다.

오답 포인트

배수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맹암거나 빗물받이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능이 넓게 배수에 관련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물순환 관련 도입시스템' 항목에 어떤 시설이 직접 들어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 인용형 문항에서는 먼저 해당 기준이 시설을 어떤 항목명으로 분류하는지 본다. 보기 중 일반 배수시설인지, 심토층 배수시설인지, 물순환 도입시스템으로 직접 열거된 시설인지를 구분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빗물받이·맨홀은 집수·점검, 맹암거는 심토층 배수, 침전조는 물순환 도입시스템이다.

NoteBase

문 11.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 내에서 공원녹지는 개방성(Openness)과 자연성(Naturalness)을 가진다.

② 공원녹지에는 옥상녹화, 벽면녹화가 이루어진 공간이 포함된다.

③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녹지의 범위와 도시공원의 세분 체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공원녹지의 범위, 도시공원의 세분, 조례상 주제공원의 종류를 함께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공원녹지는 도시 안에서 개방성과 자연성을 바탕으로 휴식, 경관,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는 공원과 녹지의 총칭이다.
주제공원은 특정 기능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이다.

핵심 구분

공원녹지는 도시공원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녹지까지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세분되지만, 도시공원녹지 전체를 설명하면서 도시공원만의 2분법으로 환원하면 범위가 좁아져 부정확해진다.
또한 공원녹지의 범위에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같은 특수 공간의 녹화도 포함되고, 서울특별시 조례상 주제공원에는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이 포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도시 내 공원녹지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개방성과 식생 기반 공간으로서의 자연성을 가진다. 공원녹지의 기본 성격을 묻는 진술로 타당하다.

② O
공원녹지의 범위에는 옥상녹화, 벽면녹화처럼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한 공간도 포함된다. 단순한 지상 녹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X
이 선지는 도시공원만을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눈 표현이다. 그러나 발문은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으므로, 녹지를 제외한 채 도시공원만의 2분법으로 전체를 설명한 부분이 부정확하다.
틀린 표현: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한다.
올바른 표현: 도시공원녹지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포함하며, 도시공원은 그 안에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세분된다.

④ O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정하는 주제공원에는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이 포함된다. 조례상 주제공원의 예시를 묻는 선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은 문장 자체만 보면 도시공원의 세분 체계를 말하는 듯하여 쉽게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발문은 도시공원녹지 전체를 묻고 있으므로, 상위 개념인 공원녹지와 그 하위 범주인 도시공원을 구분하지 못하면 ③에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발문의 대상어가 도시공원인지 도시공원녹지인지부터 확인한다. 그다음 상위 개념의 범위와 하위 분류 체계를 나누어 보고, 마지막으로 조례가 정한 세부 종류를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공원녹지는 상위개념이고, 도시공원은 그 내부 분류이며, 서울시 주제공원은 생태·놀이·가로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 비용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②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입도로, 육교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상 민간공원특례의 비공원시설 설치 요건과 공원관리청의 협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기부채납 비율, 도시공원 전체 면적 기준,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부담 주체, 외부 연계시설 설치 한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민간공원추진자 =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기부채납 =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원 부지를 공원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반면 공원관리청이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도시공원 외 지역에 직접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기부채납 부지 가액의 10퍼센트이다.
2015. 1. 20. 개정으로 비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전체 면적 기준은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공동 시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20퍼센트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다. 법은 공동 시행의 경우에도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고 본다.
틀린 표현: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 비용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올바른 표현: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한다.

② O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는 기부채납 비율 요건을 정확히 짚고 있다.

③ X
비공원시설을 남은 부지에 설치하기 위한 도시공원 전체 면적 기준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본 부분이 틀렸다. 2015. 1. 20. 개정 이후 기준은 5만제곱미터 이상이다.
틀린 표현: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올바른 표현: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X
공원관리청은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의하여 진입도로, 육교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도시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라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이다.
틀린 표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올바른 표현: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 부지 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

오답 포인트

오답은 숫자 함정에서 갈린다. ③은 과거의 10만제곱미터 기준을 기억하고 있으면 틀리기 쉽고, ④는 외부 연계시설 한도를 20퍼센트로 과장한 점이 함정이다. ①도 공동 시행 가능이라는 앞부분만 보고 넘어가면 매입비 부담 주체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민간공원특례 문제는 먼저 70퍼센트 기부채납 요건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체 면적 5만제곱미터 기준과 매입비 부담 주체를 분리해서 본다. 외부 연계시설은 허용 여부보다 한도 숫자 10퍼센트를 정확히 대입하면 선지가 빠르게 정리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민간공원특례는 70퍼센트 기부채납, 5만제곱미터 이상, 매입비는 민간 부담, 외부 연계시설은 10퍼센트 범위이다.

NoteBase

문 13. 조경계획에서 이용객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회적 수요가 생태적 수용력을 넘지 않을 경우는 생태적 수용력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대일이용자수는 연간이용자수에 회전율을 곱하여 얻는다.

③ 수용능력은 각 지역별로 고정적이다.

④ 최대일률은 1계절형일수록 높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용객 추정에서 수용능력, 사회적 수요, 최대일이용자수, 최대일률의 개념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사회적 수요는 실제로 예상되는 이용 요구량이고, 수용능력은 자연환경과 관리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이용량이다.
최대일이용자수는 연간이용자수가 특정 피크일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반영한 값이며, 최대일률은 그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1계절형 이용지는 이용이 짧은 기간에 몰리므로 최대일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생태적 수용력을 기준으로 한다"이다. 사회적 수요가 생태적 수용력을 넘지 않으면 계획 기준은 우선 사회적 수요가 된다. 생태적 수용력은 사회적 수요가 이를 초과할 때 제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연간이용자수에 회전율을 곱하여"이다. 최대일이용자수는 연간이용자수의 피크일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최대일률과 관련되는 값이지, 회전율을 곱해 직접 구하는 개념이 아니다. 회전율은 같은 공간을 일정 시간 안에 몇 번 교대 이용하는지를 보는 지표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고정적이다"이다. 수용능력은 지역 특성뿐 아니라 시설 수준, 관리 방식, 이용행태, 계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불변하는 값으로 볼 수 없다.
4번: O. 최대일률은 연간 이용이 특정 시기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보여 주는 비율이다. 1계절형 이용지는 이용이 한 계절에 집중되므로 피크일 집중도도 커져 최대일률이 높게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수요와 수용능력을 같은 개념으로 섞거나, 최대일이용자수와 회전율을 연결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1번은 "기준"이라는 말을 보고 환경 한계치를 바로 떠올리기 쉽지만, 사회적 수요가 한계 이내이면 수요량이 계획 기준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얼마나 오려고 하는가"는 사회적 수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수용능력으로 나눈다. 그다음 피크일 집중 여부를 묻는 표현이 나오면 최대일률과 최대일이용자수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전율은 같은 공간의 교대 이용 개념으로 따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는 오려는 양, 수용능력은 받을 수 있는 한계, 1계절형일수록 최대일률은 높다.

NoteBase

문 14.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종단경사도가 8%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한과 예외, 자연녹지지역의 노외주차장 허용,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종단경사도는 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이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위에 설치하는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 밖에 설치하는 주차장이다.

핵심 구분

노상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와 종단경사도 4퍼센트 초과 도로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조례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6미터 미만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경사도 예외는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고 차도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서 6퍼센트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노외주차장은 자연녹지지역이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 가능한 지역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원칙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종단경사도 8% 이하"이다. 노상주차장은 종단경사도 4퍼센트 초과 도로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예외도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며 차도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서 종단경사도 6퍼센트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틀린 표현: "종단경사도 8% 이하"
올바른 표현: "종단경사도 6% 이하"

③ O
노외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녹지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이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 예외를 정확히 적은 선지이다.

④ O
규칙상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50대 이상 노외주차장에는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두어야 한다. 이 선지는 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 기준을 묻는 취지의 선지이다.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조례가 정한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 기준이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차도 너비 13미터라는 숫자만 맞으면 넘어가기 쉬우나, 경사도 예외 수치는 8퍼센트가 아니라 6퍼센트이다. ③은 자연녹지지역을 전면 금지로 외우면 틀리고, ④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기준이 노상과 노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섞이면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상주차장 문제는 먼저 원칙 금지 기준인 너비 6미터 미만, 종단경사도 4퍼센트 초과를 잡고 예외 수치를 확인한다. 경사도 예외는 8퍼센트가 아니라 6퍼센트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노상주차장 경사 예외는 8퍼센트가 아니라 6퍼센트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예외 허용이 있으며, 50대 이상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 기준이 붙는다.

NoteBase

문 15. 환경조형시설의 설계원칙 요소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조경설계기준(2013)」에 따른다.)

① 인간척도 적용

② 비용 대비 효율성

③ 내구성

④ 주변 여건과의 조화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2013)」상 환경조형시설의 설계원칙 요소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환경조형시설은 도시 옥외공간이나 주택단지 같은 공적 공간에 설치되어 공공성과 심미성을 함께 가지는 조형물을 말한다.

핵심 구분

환경조형시설의 설계원칙에는 인간척도 적용, 조형성, 기능성, 안전성, 주변 여건과의 조화, 내구성, 인간지향적·환경친화성, 전통사상 등이 포함된다. 반면 비용 대비 효율성은 다른 재료선정이나 일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고려될 수 있어도 이 항목의 설계원칙 요소로 열거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1번 O: 설계원칙의 첫 항목이 인간척도 적용이다. 이용자에게 위압감이 없고 친근감 있게 느껴지도록 사람의 신체감각과 사용 경험에 맞춰 설계한다.
2번 X: 비용 대비 효율성은 환경조형시설의 설계원칙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다. 올바르게는 이 자리에 인간척도 적용, 조형성, 기능성, 안전성, 주변 여건과의 조화, 내구성처럼 기준에 열거된 설계원칙 요소가 와야 한다.
3번 O: 내구성은 설계원칙에 포함된다. 환경조형시설은 옥외환경에 노출되므로 다양한 외부 조건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4번 O: 주변 여건과의 조화도 설계원칙에 포함된다. 설치 대상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려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경제성이라는 표현이 다른 장의 재료선정기준에는 자주 등장하므로 설계원칙에도 들어간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 환경조형시설의 '설계원칙'에 직접 열거된 요소를 묻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 문항은 먼저 장 제목과 세부 소제목을 맞춰 본다. 재료선정기준, 설계목표, 설계원칙처럼 비슷한 목록을 서로 섞지 않으면 정답을 안정적으로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환경조형시설 설계원칙은 사람에 맞고, 장소와 조화되고, 안전하고, 오래가야 한다.

NoteBase

문 16.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점녹화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①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낮은 지역

②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③ 교육시설지역

④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중점녹화지구 지정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조례가 열거한 포함 지역과 문언을 반대로 바꾼 비포함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중점녹화지구는 도시녹화계획에 따라 녹화가 특히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중점적으로 수립하는 구역이다.

핵심 구분

조례 제5조 제3항은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교육시설지역,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등을 중점녹화지구 대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정답을 가르는 기준은 조례 문언이 '의식이 높은 지역'인지, 반대로 바꾼 '의식이 낮은 지역'인지의 차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조례 제5조 제3항 제10호는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의식이 낮은 지역'은 중점녹화지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답 선택지이다.
틀린 표현: '의식이 낮은 지역'
올바른 표현: '의식이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

② X: 조례 제5조 제3항 제2호가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을 중점녹화지구 대상으로 직접 규정한다. 따라서 ②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해당하는 지역이다.
틀린 표현: ②를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보는 판단
올바른 표현: ②는 중점녹화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③ X: 조례 제5조 제3항 제9호가 교육시설지역을 명시한다. 따라서 ③은 조례상 포함 대상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틀린 표현: ③을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보는 판단
올바른 표현: ③은 중점녹화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④ X: 조례 제5조 제3항 제5호가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명시한다. 따라서 ④도 중점녹화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틀린 표현: ④를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보는 판단
올바른 표현: ④는 중점녹화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①의 '낮은'을 조례 문언인 '높은'으로 읽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출제자는 조례의 열거 문구를 거의 그대로 두고 한 단어만 반대로 바꾸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례 열거형 문제는 먼저 발문이 포함 대상을 묻는지 비포함 대상을 묻는지 확인한 뒤, 각 선지를 조문 문언과 한 단어씩 대조하여 판단한다. 특히 높다·낮다, 가능·불가, 원칙·예외처럼 방향을 뒤집는 단어를 먼저 본다.

암기 포인트

중점녹화지구는 저의식 지역이 아니라 고의식 지역까지 포함한다.

NoteBase

문 17.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생태조경계획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목차양에 의한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가 가장 큰 식재 방위는 건물의 동향이므로 건물 동향에 가급적 창 및 벽면 가까이에 수목을 군식한다.

② 건물의 남향 옥상과 벽면에 태양각 및 태양고도를 반영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하고, 냉난방, 온수, 조명 등의 보조 에너지로 이용한다.

③ 냉기류 및 항풍(恒風)의 유입을 방해하는 고층고밀 건축을 지양하되 바람길 내 건물의 장축은 풍향에 평행하게 배치한다.

④ 건물지붕 및 외벽은 겨울철 태양복사의 획득보다 여름철 흡수 축적에 따른 과열이 더 문제이므로 알베도(albedo)가 높은 밝은 계통의 색채로 마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에너지 절약형 생태조경계획의 기본 원리인 수목 차양, 태양에너지 이용, 바람길 확보, 고알베도 마감의 적용 방향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수목차양은 여름철 직사일사를 줄여 냉방부하를 낮추는 계획요소이며, 저각의 서향 일사를 차단할 때 효과가 특히 크다.
바람길 계획은 냉기류와 향풍의 유입을 막지 않도록 건물의 밀도와 배치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알베도 마감은 지붕과 외벽의 태양복사 흡수를 줄여 여름철 과열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가장 큰 식재방위는 건물의 동향"이라는 표현이다. 수목차양의 냉방에너지 절감 효과는 오후의 저각 일사가 강한 서향 창과 벽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서향 또는 서측 창과 벽면 가까이에 차양수목을 배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2번 O: 남향 옥상과 벽면은 태양광과 태양열 이용에 유리한 면이다. 태양각과 태양고도를 고려하여 태양전지판과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하고 전기, 온수, 냉난방의 보조에너지로 활용하는 계획은 타당하다.
3번 O: 냉기류와 향풍의 흐름을 막는 고층·고밀 배치를 피하고, 바람길 안의 건물 장축을 풍향과 평행하게 두면 통풍 저항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도시 및 단지 차원의 바람환경 개선 원칙에 맞는다.
4번 O: 지붕과 외벽은 겨울철 일사획득보다 여름철 일사 흡수로 인한 과열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쉽다. 따라서 알베도가 높은 밝은 색 마감으로 반사율을 높여 열축적을 줄이는 계획은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목차양의 방향을 막연히 남향이나 동향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가장 큰 절약효과"를 묻기 때문에 여름철 오후 저각 일사가 강한 서향 차폐가 핵심이라는 점을 놓치면 1번을 고르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에너지 절약형 조경계획 문제는 먼저 일사 차단, 태양에너지 이용, 바람길 확보, 열반사 마감의 네 축으로 나눈다. 그다음 수목차양은 서향 저각 일사 차단, 태양설비는 남향 배치, 바람길은 풍향과 평행한 건물 배치, 지붕과 외벽은 고알베도 마감으로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차양수목은 서향 일사 차단, 태양설비는 남향, 바람길은 풍향 평행, 지붕과 외벽은 고알베도이다.

NoteBase

문 18. 범죄 예방 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가장 관련 깊은 이론을 제시한 이론가는?

① 린치(Lynch, Kevin)
② 레오폴드(Leopold, Luna B.)
③ 뉴먼(Newman, Oscar)
④ 리튼(Litton, Jr. Button)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CPTED와 직접 연결되는 대표 이론가를 묻는 인물·이론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린치: 도시이미지, 가독성, 경로·결절점·랜드마크를 통해 도시를 인지하는 방식을 설명한 인물이다.
레오폴드: 하천과 유역의 지형·수문 과정을 연구한 인물로 자연환경 분석과 더 가깝다.
뉴먼: 방어공간 이론을 제시하여 영역성,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를 통해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인물이다.
리튼: 경관의 시각적 질과 경관평가에 초점을 둔 인물로 시각자원 분석과 관련이 깊다.

선지별 해설

1. X: 린치의 핵심은 도시이미지와 가독성이다. CPTED의 직접 이론가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린치는 도시공간을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고 읽는지를 설명한 인물이다.
2. X: 레오폴드는 하천지형과 자연환경 과정 연구로 연결되는 인물이다. CPTED와 가장 관련 깊은 이론가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레오폴드는 자연환경 분석과 유역 이해에 가깝다.
3. O: 뉴먼은 방어공간 이론으로 CPTED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다. 주거환경의 영역성 확보, 자연적 감시, 출입통제를 통해 범죄기회를 줄인다는 점이 CPTED의 핵심 원리와 맞닿아 있다.
4. X: 리튼은 경관의 시각적 평가와 경관관리 쪽의 대표 인물이다. CPTED의 대표 이론가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리튼은 경관미와 시각자원 분석에 관한 이론으로 이해한다.

오답 포인트

린치와 리튼은 모두 공간과 경관을 다루므로 이름만 익히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CPTED는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 통제와 감시에 초점이 있으므로 도시이미지나 경관평가가 아니라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으로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범죄예방 설계, 영역성,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라는 단어가 보이면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도시이미지는 린치, 경관평가는 리튼, 자연환경 과정은 레오폴드로 구분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뉴먼 = 방어공간 = CPTED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등고선의 성질로 옳은 것은?

① 높이가 다른 등고선은 현애(懸崖), 동굴(洞窟)을 제외하고는 교차되거나 합치되지 않는다.

② 등고선의 간격은 급경사지에서는 넓고, 완경사지에서는 좁다.

③ 철(凸)경사에서 높은 쪽의 등고선은 낮은 쪽의 등고선의 간격보다 더 좁게 되어 있다.

④ 등고선 사이의 최단거리의 방향은 그 지표면의 최소경사로서 등고선에 수직방향으로 강우 시 배수방향이 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등고선의 기본 성질, 경사에 따른 등고선 간격, 철경사의 간격 변화, 최대경사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등고선은 같은 높이의 점을 이은 선이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교차하거나 합쳐지지 않는다.
급경사에서는 같은 높이 차가 짧은 수평거리 안에 나타나므로 등고선 간격이 좁고, 완경사에서는 간격이 넓다.
철(凸)경사는 위쪽이 완만하고 아래쪽이 급해지는 경사이므로 위쪽 등고선 간격이 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은 지표면의 최대경사 방향이며, 강우 시 물이 흐르는 배수방향과 일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등고선은 서로 다른 높이의 수평면이 지표와 만나는 선이므로 일반 지형에서는 교차하거나 합쳐지지 않는다. 현애나 동굴처럼 지형이 수직 또는 중첩되어 표현되는 경우만 예외가 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급경사지에서는 넓고, 완경사지에서는 좁다'이다. 실제로는 급경사지에서는 등고선 간격이 좁고, 완경사지에서는 등고선 간격이 넓다.
③ X: 틀린 부분은 '철(凸)경사에서 높은 쪽의 등고선은 낮은 쪽의 등고선의 간격보다 더 좁다'이다. 실제로는 철경사에서는 높은 쪽이 더 완만하므로 높은 쪽의 등고선 간격이 더 넓고, 낮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
④ X: 틀린 부분은 '최소경사'이다. 등고선 사이의 최단거리 방향은 지표면의 최대경사 방향이며 등고선에 수직하고, 강우 시 물이 흐르는 배수방향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②는 급경사와 완경사의 등고선 간격 관계를 거꾸로 바꿔 놓은 함정이다. ③은 철경사와 요경사의 간격 변화를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④는 등고선 직교 방향이 배수방향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이를 최소경사라고 바꿔 적어 개념을 뒤집어 놓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등고선 문제는 먼저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 넓으면 완경사'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면 철경사, 넓어지면 요경사로 판단한다. 등고선에 수직인 방향은 항상 최대경사와 배수방향이라는 점으로 선지를 검토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등고선은 안 만난다, 급하면 좁다, 철경사는 아래로 갈수록 좁다, 직교방향은 최대경사이다.

NoteBase

문 20. 「자연공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②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③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④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기본계획, 공원계획,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장기적 종합지침인 공원기본계획과 용도지구 결정·시설 설치 등 구체 내용을 담는 공원계획을 나누어 보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공원기본계획 =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공원계획 =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구체 계획이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보전·관리 계획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공원기본계획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종합계획이고, 공원계획은 용도지구 결정과 시설 설치 등 집행 내용을 담는 구체 계획이다.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은 공원계획 외의 보전·관리 사항을 다루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원계획의 정의를 공원기본계획의 정의처럼 적으면 틀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하므로 옳다.

② O
공원구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뜻하므로 옳다.

③ X
제시된 문장은 공원기본계획이 아니라 공원계획의 정의이다.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행위 제한, 토지 이용은 모두 공원계획의 내용이다.
틀린 표현: "공원기본계획"
올바른 표현: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④ O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 보전·관리 계획이라는 설명이므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정의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내용 자체가 낯설지 않아서 상위계획인 공원기본계획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면 공원기본계획이고, "용도지구 결정·시설 설치·행위 제한"이면 공원계획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공원법의 계획 용어가 나오면 먼저 장기 방향을 말하는지, 아니면 용도지구·시설·행위 제한 같은 구체 집행수단을 말하는지부터 본다. 전자이면 공원기본계획이고 후자이면 공원계획이다.

암기 포인트

기본계획은 큰 방향, 공원계획은 구체 집행, 보전·관리계획은 공원계획 밖의 보전 사항이다.

NoteBase